

한·미FTA서 ‘농산물 마지노선’ 두차례나 밀렸다

베일에 가려 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농·어업 분야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림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문건과 대외비 정부 문서를 열람한 결과다.

강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가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에서 지난 1월 농산물 개방과 관련, 최종 마지노선을 정해놓고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협상 타결을 위해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후퇴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림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고도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치면서 마지노선에서 후퇴한 것은 외교통상부 등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1월 농림부가 최종 마지노선을 정한 사실을 시인했다.

김현중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러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치며 마지노선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양국간 서로 주고받는 협상 과정에서 농업 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목표가 변경될 수 있고 또 협상 전략상 일부러 목표를 높게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불가’ 의견을 무시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주장대로 ‘도축국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제3국에서 수입되는 생우 전체에 대해 도축국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막판에 물러섰다.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TRQ)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측에 무방비로 끌려다녔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6일 열린 정부의 ‘한·미 FTA 8차협상 준비 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TRQ 물량을 10년간 매년 3%씩 늘려가되, 10년 이후에는 물량에 대해서 재협상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우리가 제시한 물량이 너무 적고, 10년후 재협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중순 열린 농업 분야 2차 고위급 회담 이후 최종 타결(4·2)까지 불과 10여일 만에 탈지분유, 치즈, 천연꿀, 보리 등의 TRQ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미국 농산물의 수출길을 넓혔다.

농산물 중에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한 30개 품목 중 18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할당기로 한 결정도 우리 농산물 보호 기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세이프가드와 TRQ 제도를 미국 요구에 따라 크게 양보한 바 없으며,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